

혼돈의 화순 만원 임대주택... 입주 8월 중순 연기

입주 일주일 전 '연기 통보' 불안
인건비·자재비 인상... 계약 차질
입주 일정 지연 뒤 대책 마련 부실
"현실적인 주거 정책 추진 필요"

파격적인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는 화순군 '만원 임대 주택 사업'이 입주를 일주일 앞두고 지자체와 임대업체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입주가 한 달가량 미뤄지는 혼선이 빚어졌다.

급작스러운 입주 연기 통보에 입주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화순군의 공사 진행 과정 점검 및 대책 마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순군은 지역에 소재한 66㎡(20평)형 임대아파트를 선임대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호응을 얻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모델 삼아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화순군은 사업 첫해인 지난해 100가구

추첨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추첨을 통해 청년 50가구, 신혼부부 50가구 총 100가구를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에 당첨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00세대는 당초 이달 3일~9일 사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순 실질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던 만원 임대주택 당첨자들은 지난달 28일 화순군으로부터 급작스러운 계약일정 변경 안내 문자를 통보받았다.

문자에는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관련 협의로 인해 만원 임대주택 계약 체결 일정이 부득이하게 변경됐다'며 '입주 일정도 9월 이후(미정) 연기됨을 안내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입주 일정 연기는 화순군과 부영주택 간 내부 리모델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정됐다.

부영주택 측은 당점 세대당 800만 원을 투입해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등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인건비와 건설 자재비 인상 여파, 건설업체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리모델링 여부에 대한 확

답을 미뤘다.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논란이 일자 결국 화순군과 부영주택은 지난달 30일 기존처럼 내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입주 연기는 불가피했다. 화순군은 입주를 기존 7월 중순에서 한 달가량 늦어진 8월 중순으로 확정했다.

이에 화순군은 당첨자들에게 '8월 16일 이후 입주', '리모델링이 앞서 완료된 세대로의 긴급 입주'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당첨자들은 1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대부분 8월 중순 입주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자들은 선 입주 이후 기존에 당첨된 만원 임대주택으로 재입주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화순군의 점검과 대안 마련이 미흡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당첨자는 전세 계약 해지와 이삿짐센터 예약을 마친 뒤 갑작스럽게 연기 통보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입주를 앞두고 연기 통보를 받아

당혹스럽고 화가 났다"며 "화순군에 문의 결과 당첨자들에게 연기 문자를 보내기 직전 부영측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전까지 화순군 측에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그는 "집주인과 이삿짐센터에 양해를 구해 8월16일 이후에 입주하기로 했다"며 "리모델링 이후 입주자 모두 스스로 대책을 구했을 뿐 군 차원에서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었다. 피해 보상은커녕 사과의 말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구북구 화순군은 추첨 당시 부영에서 못하면 군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라도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고 공수표를 날리기도 했다"며 "화순군은 2026년까지 400채의 만원 임대주택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0가구를 공급한 나주시의 '청년 0원 임대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나주시는 올해 70가구 공급 예정이었지만 건설 원자재비 상승으로 내부 수리 작

업이 늦어지면서 기존 입주 예정일보다 몇 달 늦어져 올 하반기 입주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방소멸 대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저비용 주택 공급정책이 최근 건설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가 우려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호만 앞세운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수 한국산업교육원 광주지부장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 및 입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해 지자체의 정책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철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구 소멸 대응으로 여러 지방 소도시에서 임대주택 사업 등 청년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한계가 명확하다. 'XX 임대주택' 등 구호만 앞세운 정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지역 주거 여건을 갖추고 현실적인 주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아·윤준명 기자

광주 서창·매월동 주민들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 100여명 참여해 반발
비대위 관계자 3명 식발 투쟁
광주시 "아직 논의 단계"

광주 서구 서창·매월동 소각장 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광주시에 매월동을 소각장 후보군에서 즉각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4일 광주시청 앞에서 서창·매월동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켈기대회를 열고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악취는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주민 건강을 해치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매월동은 학교도 많고 금호·풍암동과 인접한 도시에 있어 피해가 클 것"이라며 "광주시는 소각장 설치 선정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25년 전부터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매월동에 하루 200~300대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며 "100톤을 태운다고 하는데, 여기에 650톤 규모 소각장이 더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광주시는 그동안 사업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발표했다"며 "매월동을 소각장 후보군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 3명은 대회를 마친 뒤 식발하며 반대 의지를 높였다. 또 매월동 주민들은 지역 학교 등지에서 받은 8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용지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아직 후보지로서 '적합'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집회 현장을 찾아 "매월동이 소각장 설치 후보지 중 한 곳이지만, 아직 논의 단계다"며 "조만간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선정 과정·결과 등을 소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찬 기자

광주경찰, 4~6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74명 검거

유학생 대상 불법 대출 브로커 구속
무면허 시술·도박 등도 무더기 검거

광주경찰이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노동자 사이에서 벌어진 각종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7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석달간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을 펼쳐 총 74명(베트남인 73명·우즈베키스탄인 1명)을 검거했다. 특히 예금 잔고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고금리 단기 대출을 해주고 국내 체류 자격 연장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자 겸 베트남인 브로커를 붙잡았다.

단속 기간 중에는 지난 4월 광주 광산구

특별외사구역 내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도박판을 벌인 베트남인 C(46·여)씨 등 6명도 붙잡혔다.

경찰은 이 밖에도 취업 비자 없이 배달원으로 일한 베트남 유학생 D(25)씨 등 17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차례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지난해 말 경찰 조직 개편으로 외사 기능 축소 우려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이번 집중 단속을 벌였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노동자가 해마다 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치안 불안 등을 불식하는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 외국인 범죄 예방에 힘쓰고 철저한 단속·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동구새마을회 닭죽봉사

김대영 광주시동구새마을회 회장과 박미숙 새마을부녀회장 등 회원들이 4일 광주 동구 자비신행회에서 복날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200여명에게 닭죽을 대접하고 있다. 이번 온기나눔 공동체 실현을 위한 봉사에는 최정학(썩가나다 대표)가 하림통닭 500마리를 후원했다. 김양배 기자

광주·전남 6월 평균기온 역대 최고치 기록 경신

22.7도로 기존 22.6도 넘어서
광주 3일 등 폭염발생일 최다
"중국 대륙 뜨거운 공기 유입"

광주·전남 6월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평균기온은 22.7도로 지난 2022년 세웠던 22.6도 기록을 2년 만에 경신했다. 평년 6월 기온인 21.5도보다 1.2도 높은 수치다.

광주 남구, '청년 구직자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주말 이용 가능... 코디·기장 수선

광주 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몸에 맞춘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청년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독려하고, 구직활동에 따른

지난달 18~19일은 따뜻한 남서풍까지 유입돼 광주·전남 곳곳에서 일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등 극값을 경신하는 지역도 많았다.

6월19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로 1939년 지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을 보냈고 해남(33.5도)과 영광(34.8도), 진도(30.9도)에서도 극값을 경신했다.

평균 폭염 발생일도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달 1.1일로 평년(0.1일) 수치를 압도적으로 웃돌았다. 광주는 3일, 고흥은

2일, 완도·장흥·해남도 각각 1일씩 폭염이 발생했다.

강수량은 183.0mm로 평년(118.7~213.9mm)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평균기온에 대해 기상청은 6월 중순 이동성 고기압권에서 강한 햇볕에 의해 더위가 이어졌고, 중국 대륙의 높은 기온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평년보다 2~4도 높은 중국 대륙의 뜨거운 공기가 유입돼 기온을 더욱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찬 기자

이용 절차는 면접용 정장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남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ee1187@korea.kr)로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예약한 날짜에 매장을 방문해 전문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62-607-2681)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